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es of Local Governments to the
Promotion of High-tech Venture Firms in Korea

권 오 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신 동 호

(한남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I. 들어 가며
- II.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II. 국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석
- IV.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
- V. 맺으며

【Abstract】

Since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put forward strong economic policies focused on large-scale chemical and heavy industries. This approach was highly successful by the mid-1980s. However, the approach lost its comparative advantage as the competition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mid-1980s.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its strategy to promote small-scale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especially after the current government launched its governanc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Many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cently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also created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to assist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ir local economies. This paper examines the approaches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ok to assist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re existed serious over-investments led by policies confusion among various ministries and governments. The paper suggests, first, that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created by individu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coordinated by a certain agency to make governmental approaches more effective and, second, that each ministry and government must develop their own specialized roles of promoting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I. 들어 가며

한국은 1980년대까지 중급기술에 의존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 정부는 고급 기술에 기초한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경제기획원 등 중앙 부처는 앞을 다투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대상 기업에게 금융, 기술, 인력, 생산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의욕적인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됨으로써 현재의 지방 경제가 처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들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특히 IMF사태 이후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갖게 됨으로써 그러한 노력들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각종 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되고 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먼저 검토한다. 이어서 벤처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그리고 몇몇 대표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벤처기업의 산업특성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상당히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것들은 고기술, 창업 혹은 신생기업, 소자본 중소기업, 기술자 자신의 창업과 경영, 높은 위험, 그리고 높은 기대수익 등의 특징을 가지며,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외부화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만을 특화하여 생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생산기술의 첨단적 성격과 생산과정의 전문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첨단 벤처기업은 천연자원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적 자원(기술, 노하우, 능력, 행위의 방법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상적(conceptual) 자원은 다양한 행위자(기업, 조직, 지역)들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에 걸쳐 학습되고 창출된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의 우위는 혁신, 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학습과 창출과정은 영역적 생산체제에 기반하며, 접근성이나 대인 접촉에 특별히 의존한다. 즉 벤처기업은 신기술의 학습과 유통 그리고 생산에 적합한 혁신적 환경에 대한 친화성을 나타낸다. 이는 기술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겠으나, 특히 전문화된 벤처기업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공간적 집적과 관련 생산활동들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둘째, 벤처기업은 신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상품경쟁력을 추구하며, 전문성과 독점적 기술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나 내부화 경제를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벤처기업은 핵심역량에 주력하며 여타의 것들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벤처기업들은 시장수요의 변화와 신기술의 발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생산체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다품종소량생산과 단축된 제품의 수명주기 하에서 생산제품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유연적 생산방식의

도입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기업 네트워크이다. 즉 관련업체들간의 다양한 산업네트워크는 벤처기업들의 생존 및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

넷째, 벤처기업은 고급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인력 활용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벤처기업은 일시적으로 호경기가 발생하거나 제품수요가 증가하면 고용을 대폭 늘여야 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서는 단기간 내에 인력을 대량 감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히 유연한 노동 시장과 함께 고급 전문인력에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여 창업됨으로, 가능한 창업비용과 기초투자비용(sunk cost)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창업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생산과정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관련 산업활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게 된다.

2. 벤처기업의 성장조건

벤처기업은 전술한 특성들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상이한 창업 및 성장조건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첨단 벤처기업 발전의 전형적인 특성은 특정 분야에 높은 안목과 창의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전문 생산업체들이 서로 집적하고 연계관계를 갖는데 있다. 전문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실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효과와 혁신이 증진된다. 신 기술혁신은 기존 기술의 학습과 상호 모방에서 시작하여 시너지 현상에 의해 개화되는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집적의 경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보와 기술이 관련활동 및 전문가들의 집적에 의해 상호 학습효과와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첨단화되거나 다품종 소량생산화된 고부가가치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에 특화 하는데 대한 보완요소로서 다양한 관련 기업들 간의 물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원활한 부품 네트워크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젊은 시절

스티브잡스가 실리콘밸리의 어느 차고에서 개인용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 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적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업들간의 공간적 집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첨단 벤처기업의 성장조건을 압축하자면, '벤처기업들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고급기술인력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광범위한 외부적 생산네트워크에 고도로 의존하며 그와 연관된 각종 전문활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첨단 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첨단 벤처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과 전문인력들의 공간적 집적과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본연구의 이론적 제안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창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각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적경제를 위해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벤처기업의 고도화된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상당부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한 정부부문, 혹은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학이 주도해서 첨단적 기술이 생산 유통되는 생산네트워크를 개발해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토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이 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의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집적체로서 효율적인 산업클러스터, 혹은 신산업지구,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일로 판단된다.

기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증대는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그 노력의 대부분은 산업클러스터들을 개발하는데 맞추어져 왔다.¹⁾ 오늘날 번창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들 대부분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에 의해 개발된 것들이다.

과거에 미국은 정부부문이 거시경제정책에만 개입했지만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이 첨단기업 육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주관하는 「대통령산업경쟁력위원회」를 두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적 산업클러스터들은 대부분 대학의 주도에 의해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성장하였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또한 지방정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첨단 산업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와 텍사스오스틴, 루트128은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성장하였고,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성숙되었다. 이 클러스터들은 이제 기술개발 역량을 토대로 세계적인 산업 중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근래 들어서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기업주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 구조를 전환했고, 기업유치 테스크포스를 결성해서 창업과 이전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1970-80년대 이후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국가적 과제로 해오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소피아양티폴리스 등 프랑스의 각종 과학산업단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협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되었다. 이탈리아의 모데나시는 도시 주변에 신산업타운들을 조성하여,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산업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해 왔다. 이 산업타운은 상·공 혼합에다 주거까지 어우러진 복합타운들로서 이탈리아의 고부가가치형 경공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은 1980년대에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첨단기업의 유치, 산업단지 개발, 기술단지 조성을 채택하였고, 특히 중앙정부들의 주도로 설립된 지역개발기관들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영국에서 도시재개발과 동시에 산업진흥 수단으로 사용된 상·공 혼합의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었지만 외국기업 유치

1) 국가부문이 산업화를 직접 지도하고 기업 육성을 챙기는 산업정책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발명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전략은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들은 기술단지 개발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국은 근래에 경제성장률, 산업유치 실적, 실업률 감소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일본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15개의 신규 유망성장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업정책들의 핵심은 혁신 능력이 높은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에 두어져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1960년대에 이미 츠크바학원연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했고 1970년대에는 關西지방의 핵심 도시들(오사카, 교토, 나라)이 간사이학원연구도시를 개발하였고 고베시는 독자적으로 고베학원연구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작하여 ‘테크노폴리스’들을 개발해 왔는데, 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중앙정부는 사업심사와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개발 의지를 보여준다.

대만도 정부 주도로 科技島(High-tech Island)를 목표로 10개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6개년 계획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가 그간에 추진해온 탁월한 성과작은 신주과학산업단지이다. 대만 정부는 컴퓨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이 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컴퓨터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대만 정부는 이제 타이난시 인근에 타이난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타이베이시에는 소프트웨어산업타운을 조성하였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네트워크 전략과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창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벤처기업 육성은 전문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 전문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들의 복합체로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Ⅲ.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석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7년에 들어와 중앙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경제활력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산업시책으로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거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벤처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탈공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취약해지고 있는 서울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서울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이다.

서울형 산업은 서울의 특성에 맞고 서울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규정된다. 서울형 산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고급 인력 집약적이며 공간 절약적이어서 토지 의존도가 낮고 공해유발이 작고 소규모 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부가가치와 고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애니메이션기업,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적인 서울형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은 인간의 창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집약형

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정보와 연구전문인력이 집적된 서울을 떠나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서울형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고지가, 고임대로 등 고비용구조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서울경제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 집약형 산업체제로 전환하여 동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및 기술혁신의 지렛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벤처기업 육성의 주요 전략으로 벤처기업 발굴과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집단화는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동일 단지 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편의시설들을 입주시키고 동시에 은행, 우체국, 창업투자회사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1995년 6월에 강서구 등촌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서초구에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설립하여 3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를 강남구 개포동에 대지 4,685평, 건물 30,000평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 센터는 전체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17,400평에 서울형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을 함께 입주시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시설의 활동 등을 영위하고, 8,000평에는 창업보육센터, 컨벤션센터 및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예비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 역점을 두어온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1999년 5월 중구 예장동에 건립되었다. 이 센터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테크노마트빌딩 등 기존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해 벤처기업의 집적을 도모해 왔다. 그런데 이 센터나 집적시설들은 서울 벤처기업의 중심타운인 강남구의 테헤란밸리나 여의도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地區的 수준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벤처기업 지원의 특징은 한번 방문으로 기업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벤처기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 입지,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창업자금 용자지원, 운영자금 용자지원, 특별 신용보증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자금 용자지원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억원 이내 범위에서 용자를 해 주는 제도이다. 용자조건은 금리 연 5%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방식이다. 특히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은 담보 없이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해서 용자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금 용자지원 제도는 창업 후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으로 하여 2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용자조건은 연 7.5%로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특별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부산 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는 각종 유관 기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소개, 알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민간 엔젤 캐피탈 등에 유망 벤처기업을 알선 소개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왔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입지지원 시책은 사무실 무상 제공제도이다. 이 제도를 위해 마련된 건물은 김해공항, 남해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근처에 위치한다. 입주대상 기업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이다. 입주기간은 3년 미만이며 작업실 규모는 업체당 30평 정도가 제공된다. 입주업체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보육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라, 영도, 경성대학교 등에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실을 조성하였다. 모라 소프트웨어 단지의 경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위치한다. 2000년 6월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보육실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입주기간은 최대 2년이고 보육실의 규모는 업체당 17평 정도이다. 입주대상 업체는 예비 S/W 창업자나, 창업 후 2년 이내인 S/W업체로서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이고, 관리비 월1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이 창업보육실은 사업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영도지역에도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확보하고 벤처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건물 내 조성되어 있는 이 보육센터는 최대 입주기간이 2년이고, 업체당 15평 정도를 대여한다. 입주대상 기업은 예비 소프트웨어 창업자나, 업력 2년 이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보증금 100만원에 관리비로 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 보육센터에서는 사업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12개 정도, 정보통신부가 5개, 산업자원부가 신기술창업지원단 산하에 4개, 그리고 별도의 벤처빌딩 2개 등의 생산공간을 조성하여 약 400개의 기술기반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부산시의 의욕적인 노력은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에 대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발적인 벤처기업 유치 방식은 벤처기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 형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또한 오래 전부터 지사과학단지를 지정하여 첨단과학단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까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부산시는 한편 종전에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수영만 일대 30만평 규모의 토지에 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추진 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이에 부산시는 최근 “센텀시티” 계획을 수립하여 5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중심 벤처기업 집단화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컨벤션 센터, Information Data Center,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업체들의 충분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벤처기업들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 세제, 금융 등을 3년간 지도, 조언하는 벤처기업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기술지원제도를 도입하여 16억원 규모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벤처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최우선 선정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등과 지역협력센터(RRC)를 조성해서 자동차 분야, 항만시스템 분야, 해양산업 분야 등의 벤처기업을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주고 있다.

3)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중앙정부 및 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시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 특히 자금지원, 입지지원,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의 용자 대상업체로 벤처기업들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용자 신청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공장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 방안은 ①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이 벤처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용자 대상업체로 명기하고 이들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②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부를 벤처자금화 하기 위한 조례를 개

정하는 것이다.

인천 신용보증조합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합은 시와 경제단체장, 지역 금융기관장, 지역 상공인 등이 공동 출연하였다. 인천시는 또한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인천소재 대학교수, 기업체, 금융권,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엔젤클럽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및 경영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엔젤클럽의 구성인원은 약 10 - 15명 정도가 될 것이며 1998 하반기 중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지원을 공정히 하기 위해 기술력평가센터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벤처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과 기술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지원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보증지원 가능 금액 평가, 기술력 및 사업성 평가 등이며, 평가결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국 기술진흥기금 자금대출시 우대지원, 기술개발시범기업 소요자금 전액지원 및 벤처캐피탈(창투자, 엔젤클럽) 투자대상기업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평가대상은 금융지원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소재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업체들로서, 평가인력 및 운용은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연간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입지지원 사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당초 인천시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인천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였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신도시(미디어밸리) 제2공구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 단지의 면적은 S/W파크 20만평 중 2만평 규모로서, 유치시설은 벤처기업 이외에도 벤처캐피탈회사, 연구소, 컨설팅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벤처기업 지원시설 등 이었다. 또 인천시는 송도 테크노파크를 미디어 밸리의 핵심부인 제2 공구에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사업기간은 1997년 - 2002년이며, 예상사업비는 2,312억원(현금1,768억원, 현물 544억원)으로 계획되었다. 고도 기술지

원 창업보육(TBI),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 창업의 활성화, 고용 창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사업주관사 격인 미디어밸리주식회사가 미디어밸리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지부진한 상태에 처했으며, 이에 인천시는 송도매립지에 여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젝트는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이 센터는 정보통신산업, 특히 S/W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산업용품 유통센터 내 418평에 15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고가의 공동 이용장비와 정보 지원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 고유의 산업정보 D/B를 개발하여 기업체 현황, 기술 및 인력장비 현황, 특허 및 학술정보 등을 수록,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천시와 산업기술 정보원이 지역 및 전국의 산업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산업기술정보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왔다.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기업관리시스템과 산업용품 유통센터의 Web시스템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시스템, 그리고 산업용품 유통센터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왔다.

4)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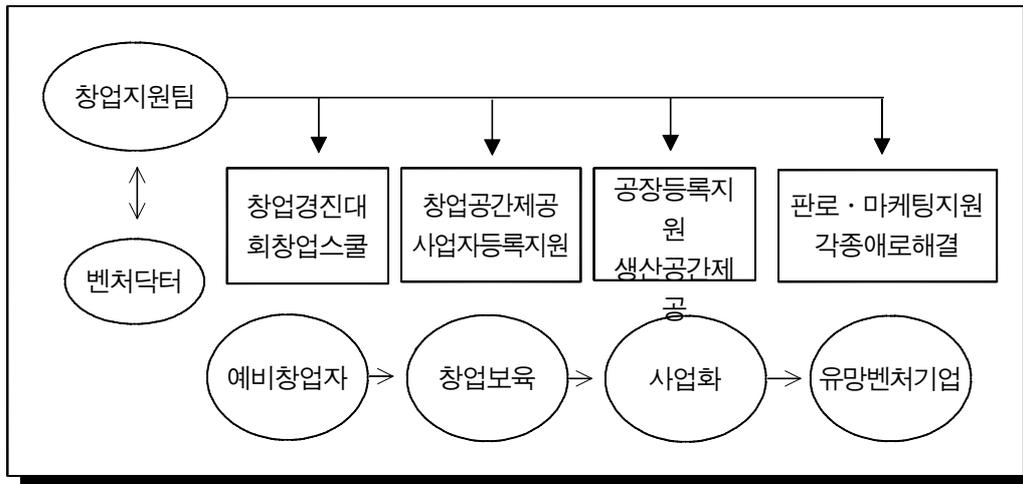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는 벤처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등 입지지원과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그리고 벤처닥터제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한 대덕벤처-테크노밸리 조성계획(TVTV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창업지원제도로서 벤처닥터제를 운영해 왔다. 벤처 닥터제는 창업 및 기술경영상의 애로 타개를 위해, 법률, 세무, 마케팅, 창업 및 특허, 노무 등 5개 분야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변리사, 노무사 등 8명의 전문가를 벤처기업 자문위원, 즉 벤처닥터로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된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벤처닥터제는 비상근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 형태로 의뢰업체에서 부담한다. 이용실적을 보면 98년 설립 후 2000년 5월까지 총 882건이 접수, 상담되었다. 그 가운데 창업 치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아서 350건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회계분야 329건, 법률분야 109건의 순이었고, 이용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외에도 대전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는 바, 2000년 5월까지 총 1114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제품관료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아서 417건의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 300건, 벤처에 관한 것이 133건, 창업에 관한 것이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대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2000).

또한 대전시의 창업스쿨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실시되고 있다. 강사진은 변리사, 회계사, 벤처닥터, 전문교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적인 내용의 과목을 강의한다. 1999년에는 3회에 걸쳐 5일간, 혹은 2일간의 창업스쿨이 진행되었는데, 총 507명이 수료하였다. 1차 수료생 가운데 실제로 8명이 직접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대전시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교육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5월 3일간의 창업스쿨이 1회 추진되었는데, 총 890명이 수료하였다. 2000년에는 6월 이후 3회에 걸쳐 총 27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창업스쿨은 법률, 특허, 코스닥 등록절차, 모범 사례, 연구원, 혹은 교수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그림 3〉 창업추진 체계도



자료: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999: 141)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저리 대출을 제도화하여 2~5%의 이차차액을 시가 부담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경쟁력평가센터」를 KAIST 내에 설립하고, 「대덕엔젤마트」와 「대덕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대출위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방식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증제와 과학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1999년 8월부터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평가단과 공동으로 20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쟁력 평가센터(COTAC)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기술경쟁력 평가센터는 12개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서 발급, 기술경쟁력 인증(CT, Competitive Technology) 마크 발급, 기술거래 기준가 등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토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기술신용기금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술평가센터의 수와 평가전문인력을 대

폭 확충함으로써 증가하는 기술평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1999년 4월 대전 시민의 과학생활화 도모, 고급 과학기술 인력간의 정보 교류의 장 조성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개발 등을 위해 행정기관장 5명, 연구소 연구원 76명, 대학교수 60명 등으로 구성된 대덕과학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안정된 입지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창업초기단계에는 시, 대학, 연구소 등 창업보육기관간 협의체를 도모하고, 정보제공과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의 붐 조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창업보육실을 졸업하여 사업화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Post-TBI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가 1998년 Post-TBI로 도시형 제조업종의 「벤처타운 다산관」을 완공하였고, 2000년 10월까지 신탄진 제3, 4공단 내 1,500여평 규모의 「벤처타운 장영실관」을 건립하여 벤처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약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벤처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에니메이션 분야의 특화를 위해서 EXPO과학공원의 관리동 청사에 「벤처타운 종합영상관」을 마련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영상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10여개 업체가 활동중이다. 또한,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서 연구단지 및 과학산업단지내에 대규모 벤처기업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2년 부지만 지정해 놓고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초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겹치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활발한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기초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전략은 창업지원센터 설립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몇몇 구청은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각종 사무기기를 지원하는 간이형 창업보육센터 방식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1996년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창립하였고, 1998년 7월에는 중랑구청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또 1998년 8월에는 송파구청이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금천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성북구청 등 서울시내 10 여개의 구청도 창업보육센터를 구청내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대와 연계하여 관악벤처센터로 명명된 벤처산업빌딩을 확보하여 서울대생과 서울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에게 싼 임대료에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로서, 강동구 벤처기업 지원센터의 경우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평당 1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 사무실에 대해 1/3의 가격이다. 중랑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업체당 7-10평 규모의 창업보육실을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평당 4-6천원, 관리비 평당 월 4천원에 공급하였다. 중랑구는 구 상봉 1동 동사무소를 보수하여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였다.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 이외에도 각종 사무용 기기와 근거리 통신망(LAN),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송파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쾌적한 기술개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근거리 통신망과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으며,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었다. 중랑구는 창업지원센터내에 중소기업 정보교류실을 설치하고 PC, 복사기, FAX, 도서 등 행정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 각종 자료 입수 등을 창업보육센터 직원이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과 중랑구는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정례적으로 전문가 초빙 경영지도 교육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소개하는 벤처기업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지원 자격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창업 희망업체나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업체에 대한 업종 제한은 첨단 분야 업체와 의료기 분야 등 첨단벤처기업을 위주로 하고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는 관내 기업들이 입주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입주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고 그 내용도 빈약하다. 수도권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안양시와 고양시가 벤처기업지원 시책을 준비 중에 있었고, 안산시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여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안양시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기업 육성이 포함됨으로 해서 벤처집적시설 건립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벤처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신임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벤처집적시설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관내 반월공단 내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벤처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매우 미미하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 구미시, 광양시, 창원시, 춘천시, 천안시, 마산시, 전주시 중에서 전주시와 춘천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들은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수적인 정책적 협조 정도에 그쳤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주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 건립이다. 전주

시는 원래 20만평 규모의 첨단 영상산업단지를 전주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현실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최근 사업을 수정하였다. 전주시는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건물은 3,400평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의 내부를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증축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첨단산업 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멀티미디어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을 주요 육성부문으로 삼고 있다. 이 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작업은 춘천시 시정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개의 계를 특별히 설치하였고 '소양강의 기적을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을 건립하였다. 춘천시 후평동에 준공된 연건평 3,000평 규모의 멀티미디어기술 지원센터와, 같은 규모의 생물산업 혁신지원센터는 총 47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등 지방비가 30% 가량이다.

이 건물들은 1998년 3월에 착공되어 1999년에 준공되었으며 벤처기업 보육실과 함께 각종 지원시설들이 입주하였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춘천시는 춘천시 서면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주요 시설은 만화 이미징 정보센터로서, 이 건물 주변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시가 시행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은 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비어 있는 공공 청사를 활용하거나 공단 내 폐건물들을 사들여 벤처기업에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건물들은 보증금 없이 대략 평당 4천 원(실가격의 50% 수준)에 임대되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입주 희망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와 마산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포항시, 천안시는 벤처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3. 기존 정책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래 들어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사업들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네트워크 구축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전략이 취약하고, 관련기업간 네트워크이 부족하고, 연관된 산업정책간 통합성이 부족한 점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전체를 끌어갈 이론적 토대와 핵심전략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고기술형 산업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가 지나치게 다양한 시책의 나열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전략이 미흡하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업들이 긴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기술 생산체제를 지원하는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전략들이 산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시책들은 개별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기업 지원 위주의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은 진정한 의미의 기술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의 모방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벤처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기 위해서도 대규모 차입경영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산업정책의 통합성 부족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다른 약점은 여타

관련 산업정책들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산업고도화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정책단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있어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²⁾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업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이 너무 큰 데 대해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적 조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정부 부처 내에서 너무 다기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다. 현재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적절한 연계성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간의 산업 육성정책들이 보여준 대상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정책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다양한 법과 시책들을 만드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벤처기업 육성의 각종 시책과 자금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는 것이다. 생산네트워크의 구성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면 국가적 전문기업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점에서 최근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생산네트워크 전략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성이 적지 않고 구체적인 생산네트워크 형성 전략이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2) 예컨대 벤처기업전용단지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벤처기업의 육성을 산업고도화의 전체 틀로부터 분리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IV.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의 핵심과제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술적, 물류적,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고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로서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의 착근(embeddedness)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sunk cost)을 줄여 주고, 고기술 기업의 양산을 통해 일반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의 첨단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들이 존재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다 면밀한 지역분석과 산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 전략을 토대로 하여 모든 시책들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적 수준에서 벤처기업과 관련산업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생산네트워크(전문화 된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지 벤처기업만을 위한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지방적 산업전문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구축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 정부의 포괄적 지원사업, 핵심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대학) 주도의 지방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원화되어야 하며, 지방 생산네트워크 조성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원시책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정부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 금융, 조세, 보조금 지원시책이 종합적,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시책들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야 한다. 예

컨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내 벤처기업 진흥지구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업체들에 공공 자금지원을 집중하여야 하는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 지원이나, 사무실 혹은 토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적절한 시기와 장소의 선택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경제적 구조 조정이 긴요해진 현 시점은 고기술 체제로의 도약 및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 매입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V. 맺으며

벤처기업은 사업 성공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실패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창업형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아웃소싱과 기업간 네트워킹에 의해 기초하여 성장하며, 벤처기업가는 실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험비용의 최소화와 분산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기존의 산업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같은 논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정책은, 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역량의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및 생산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을 검토하였다. 향후 정부정책은 벤처기업들이 세

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기술학습능력과 혁신역량)과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적 수준에서 전문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착근(embedded)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를 달성하는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오혁(1998.1), “벤처산업육성전략과 지자체의 역할”, 『지방자치』
- 기정훈(1997), 『벤처기업의 형성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홍 외(1997), “벤처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망”, 벤처기업협회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000. 6), 미발간 자료 .
-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1999), 「중소·벤처기업창업강좌」
- 대한상공회의소(1994), 「중소기업지원체계의 효율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박삼옥(1996.2), “한국첨단산업의 지방화와 세계적 연계망”,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 81호
- 박용규, 강신겸(1997. 1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산업연구원(1997.5),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 송장준(1997.5),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중소기업리뷰』
- 신동호(2000.6), “첨단 벤처기업의 산관학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2권 제1호.
- 양현봉 외(1997.5),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 오덕성 외(1995.12), “과학기술도시와 지역개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 이장우(1997.4), “한국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미비교를 통한 벤처산업 발전 전략』, 벤처기업협회주최 '97한미벤처포럼자료집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1997),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 한정화(1996),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연구원

2. 국외문헌

- Asheim, B. T. (1992), "Flexible specialization, industrial districts and small firm: A critical appraisal" Ernste, H. & Meier, V. (eds).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zation*, Belhaven Press.
- Howells J. (1986), "Industry-academic Links in Research and Innovation: A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20
- Malecki E. J. (1991),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ynamic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Change*, Longman, 1991.
- Morgan K. (1992), "Innovating by Networking: New Models of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unford M., Kafkalas G.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2.
- Piore M. J., Sabel C. 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Scott A.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London, Pion
- Scott A. J., Storper M. (1992), "Regional Development Reconsidered," in Ernste H., Meier V. (eds.),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sation*, London, Belhaven Press
- Weinstein O. (1992), "High Technology and Flexibility," in Cooke P., Moulaert F., Swyngedow E., Weinstein O., Wells P. (eds.), *Towards Global Localization*, London, UCL Press
- Yeung, H.W. (1994), "Critical Review of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4)